

“도청 별관 철거 후 축소 모형 전시 검토”

김춘섭 亞문화수도정책관 “이전 복원도 어렵다” ... 공대위 대응 주목

아시아 문화전당 부지 내 옛 도청 별관 철거 논란이 4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문광부가 “별관을 철거하되 별도의 공간에 실물을 축소·전시하는 대안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을 모은다.

도청 별관(도청 본관에서 도의회 사이 4층 콘크리트 건물)은 아시아 문화전당 부지 내 철거대상 건물에 포함됐으나, ‘도청 보존을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가 지난 6월부터 “5월 항쟁 유적지”라며 철거반대 농성을 벌여 논란이 되고 있는 건물이다.

김춘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 문화

도시 정책관은 14일 광주시 동구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18일 열리는 ‘문화전당 내 구 도청별관에 관한 시민대토론회’와 관련,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별관의 실물 축소 보존 방안이 나온다면 5월 정상을 기리기 위해 문화전당 내 ‘민주평화교류원’에 전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 그동안 “별관철거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공대위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김 정책관은 “전당의 설계 개념을 살리고 오는 2012년 개관할 문화전당의 공사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는 별관의 철거는 불가피하다”며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별관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된 건물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해체 복원이 어렵다”며 이전 복원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문화전당 공사차질과 관련, 김 정책관은 “별관을 제외한 전당 부지 내 굴착공사가 완료되는 오는 20일경까지 별관철거 문제가 해

결되지 않는다면 전당 조성 공사에 연쇄차질이 빚어져 오는 2012년으로 예정된 전당 개관 일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현재 공사차질로 도청본관 및 보존건물의 리모델링 예산 100억원을 반납해야 하는 것은 물론 공사가 중단될 경우 시공업체에 지불해야 할 공사지체 보상금도 1일 100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공대위 관계자는 “별관 축소 모형 전시 방안이 공식제안되거나 검토된 바 없기 때문에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방안 등을 통해 별관논란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시설

정부, F1대회 ‘발목잡기’ 당장 중단해야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2010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에 급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F1대회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광역경제권 개발,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수도권을 집중 지원하고 있는 정부가 F1대회의 발목을 잡고 나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3일 국회 국제경기지원특위에서 F1대회의 공공성 부족과 과도한 국가재정 부담 등을 들어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가 차원의 지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했다. 접근성과 숙박 및 관광시설 등 전남도의 여건상 관광과 동원이 쉽지 않아 대회를 12년간 개최할 경우 모두 2천824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문광부의 주장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많다. 공공성이 없다는 것부터 말이 안 된다. 세계적으로 F1대

회는 국가지원이 일반화돼 있고, F1대회는 물론 올림픽과 월드컵까지 이미 상업화 추세에 있다. 적자 예상액도 경주장에서 F1대회만 개최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에 따른 것이다.

딱 한번 치러지는 올림픽과 월드컵에는 6~7천억원의 국비를 지원했으면서도 12년간 열리는 F1대회의 보조금 1천130억원이 과도한 부담이라고 할 수도 없다. 선진국을 보면 대도시권이 아니어도 관광객이 몰리고 있고, 중국 싱가포르 같은 모터 스포츠 후진국도 성공했다. 전남은 청정지역이라 안 된다니 ‘청정세’라도 따로 걷어줄 테니 거만하지 않았으면 말인가.

정부는 밝히지 못할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F1대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 전남 최대 현안의 하나인 F1대회의 발목을 정부 앞장서 잡아서야 되겠는가.

중부세 ‘위헌’으로 비상결린 지자체 재정

중합부동산세(중부세)의 핵심 조항들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불똥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튀고 있다. 정부는 중부세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교부세로 지원해 왔으나 중부세 위헌 결정으로 세입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다.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부동산 교부세는 중부세가 신설되면서 재산세 등에 대한 감세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줄게 되자 보전 차원에서 중부세의 일부를 지방에 돌려 주기 위해 도입됐다. 올해 광주·전남이 지원 받은 부동산 교부세는 광주 820억원과, 전남 2천241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중부세 부과 기준의 완화로 2천억원 이상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부동산 교부세가 줄어들면 열악한 지방재정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들은 부동산 교부세를

지원받아 각종 사업을 시행해왔다. 교부세가 줄어들면 지방자치단체들은 마을 안길 포장이나 가로등 설치 등 기본적인 사업마저 축소할 수밖에 없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없다. 검토하고 있는 보조금 증액 지원이나 세법 개정을 통한 손실분 충당 등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구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는 부동산 교부세 감소를 메울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광주·전남 자치단체의 재정은 매우 열악하다. 자체수입으로 인건비까지 충당하지 못하는 곳이 수도무하다. 이번 기회에 지방소득·소비세를 도입하고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글로벌 금융 위기 타개 머리 맞댄다

李 대통령, G-20·APEC 회의 참석 출국

글로벌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선진국과 신흥경제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G-20 정상회의가 15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10년 전 아시아 금융위기 발발을 계기로 출범한 G-20 체제는 그동안 연례 재무장관 회의 형식으로만 개최됐으나 회원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은 무역규모 세계 10위, 외환보유액 세계 6위, 국내총생산(GDP) 13위로 G20 회원국 내에서도 상당한 위상을 차지하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 신흥경제국 가운데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무역규모 세계 10위, 외환보유액 세계 6위, 국내총생산(GDP) 13위로 G20 회원국 내에서도 상당한 위상을 차지하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 신흥경제국 가운데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G-20 정상들은 회의 개막에 앞서 14일 저녁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백악관 만찬행사를 가진 후 15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금융정상회담을 갖는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G20 금융정상회의와 제16차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11박13일 일정으로 14일 오전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14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회의, 브라질 공식 방문, 페루 국민방문에 이어 22일부터 23일까지 페루 리마에서 개최되는 APEC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중부세 세대합산 6,300억 연내 환급

장기 보유 1주택자 대상 안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부는 2006년과 2007년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으로 납세한 중부세 중 총 6천300억원을 연내에 환급해 주기로 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거주목적 1주택자의 경우 이미 낸 세금에 대한 환급은 없

며, 올해분을 포함한 향후 납부에 대해서는 당장의 후속 입법에 따라 결정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중부세 위헌결정에 대한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부세 환급대상은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으로 2006년과 2007년에 신고납부한 사람들로, 이들에게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적용해 납부할 세액을 재계산한 뒤 당초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돌려준다.

/연합뉴스



위용 드러낸 이지스 ‘울곡함’ 해군은 14일 경남 거제에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조선소에서 이상희 국방장관과 정욱근 해군참모총장 등 각계 주요 인사와 조선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해군의 두 번째 이지스 구축함인 ‘울곡이함’(7천600t급) 진수식을 가졌다. /연합뉴스

“무안공항 활성화 위해 통관 서비스 개선”

허용석 관세청장 광주 간담회

공항 이용객 검사가 간소화되는 등 통관서비스 개선으로 무안공항이 활성화된다.

허용석 관세청장은 14일 전국 분부세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해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공항 이용객에 대한 검사를 간소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관 서비스를 개선해 무안공항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여행자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과학적인 정보 분석으로 선택과 집중에 따

른 업무를 수행해 불필요한 검사를 더욱 줄여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 등 주요 여행국 통관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여행자 통관 정보데스크’를 설치하고 입국장에 ‘친절도우미’를 운영해 통관 서비스의 질을 높여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내 관광산업의 22%를 차지하고 광주 지역경제를 이끌고 있는 관광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스피드 통관을 24

시간 지원하고 검사의 생략과 신용담보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서해상에서 이뤄지는 밀수에 대해서는 “우범 해상과 항구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횡단세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국경원이나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해상 밀수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마친 허용석 청장은 이재흥 광주세관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광주 광산구 첨단산업단지 방문해 지역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광주세관에서 열린 전국 분부세관장 회의에 참석했다.

/이종대기자 jilee@kwangju.co.kr

감사원, 쌀직불금 부정 수령 28만명 국회 제출

17일까지 국조 특위에

감사원은 14일 쌀직불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28만명의 명단을 오는 17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06년 쌀직불금 수령자 중 비료구매 및 벼수매 실적에 없는 28만여 명의 명단 작성을 완료했고, 17일까지 쌀직불금 국정조사 특위에 제

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어 “특위에 명단을 제출할 때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국회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2006년 쌀직불금 부정수령 추정자가 28만명에 이른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았고, 지난해 감사 종료 후 해당 명단을 삭제했으나 쌀직불금 사태가 일파파로 확산됨에

따라 김홍식 감사원장은 지난 10월22일 28만명 명단을 복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감사 당시 28만명 명단과 공무원 직업내역 등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매칭시켜 17만명(공무원 3만9천971명,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2천143명, 공기업 임직원 6천213명, 금융인 8천442명 등)이 농업 이외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균형발전위원장이 지역 불균형 조장하나

최상철 위원장 수도권 규제 완화 옹호 ... 지역단체 반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최상철 위원장이 14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는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일 뿐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포기가 아니다”고 밝힌데 대해 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을 위사시키는 국가불균형 정책인데도 균형발전위원회가 현 정부의 정책만 옹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전남 담양 리조트에서 광주와 전남·북 발전연구원 주최로 열린 워크숍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 합리화 발표 이후 지방에서는 ‘선 지방 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

화’라는 정부의 국정철학이 변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규제 완화는 지방의 소외감을 가중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도권에 비합리적인 규제를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발언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경제는 물론 사회, 문화 등 모든 역량을 서울에 집중, 고착화시키는 국가 불균형정책”이라며 “수도권 중심 논리에만 집착하지 말고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임대아파트 분양 중재

대책위 광주서 첫 결성

첨단 부영1차 협상 관심

임대아파트 분양 갈등과 관련, 주민과 건설사의 요구를 중재할 분양전환대책위원회가 전국 처음으로 광주에서 결성돼 향후 활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 이용섭(광주 광산을) 의원은 1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주민과 건설사의 상생을 위해 시의원과 구의원, 주민대표로 구성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중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 의원이 상임고문을 맡고 유재신 시의원(광산2선거구)이 본부장을, 김민중, 송경중 광산구 의원이 부위원장을, 손호윤 부영1차 임차인 대표회의 회장이 지역본부장을 각각 맡아 활동을 한다.

대책위는 이에 따라 27일 분양전환이 예정된 부영1차 1천198가구에 대해 부영건설 측과 주민대표 간 협상중재에 나설 예정이다.

광주지역에는 분양가 자율화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건설된 임대아파트 15 곳, 1만1천412세대가 분양전환될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눈에 띄는 결과를 이끌어 낼지 주목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내주부터 비자 없이

미국 여행 할수 있다

관광과 상용 목적의 90일 이내 무비자 미국여행이 다음주부터 시작된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4일 “미국은 예정대로 17일부터 우리 국민에게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내주 월요일부터는 비자없이 미국을 여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VWP를 이용하는 여행자는 전자여권을 반드시 소지해야 하고 여행 전에 반드시 전자여행허가 사이트(https://esta.cbp.dhs.gov)를 통해 입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합뉴스

빛日만평

- 김중두



떨어지는 낙엽만 발길에 채인다

| | | | |
|---|---------------------------------|-------------------|---|
| 光 州 日 報 | | The Kwangju Ilbo | |
| 회장 許宰浩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 논설실장 金東永 | 편집국장 申港樂 |
|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20 우편번호 501-7111 | | | |
|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 | www.kwangju.co.kr | |
|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 사회 2부 2200-619 <F A X 227-0118> | 경영지원국 2200-511 |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
| 편집부 2200-629 | 문화홍보부 2200-626 | 광고매점국 2200-521 |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
| 정치부 2200-616 | 여론개발부 2200-628 | 경제부 2200-617 | 체육팀 2200-627 |
| 사회1부 2200-618 | 사 진 부 2200-690 | 사회1부 2200-618 | 조 사 부 2200-570 |
| <F A X 222-4267> | | |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 | | |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